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 이재명 당선인이 걸어온 길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고된 삶 이겨내다

한 소년이 있었다. 교복 한 번 입어보지 못하고 기계기를 뽀뽀한 공장으로 출근했던 열세 살 소년. 그 소년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을 펴고 공부하며 주경야독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2025년 6월 3일, 그 소년은 내란의 험난한 여정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소년공 시절의 이재명 당선인

‘언젠가는 냉장고에 과일 넣고 살고 싶다’ 어렸을 적 소박한 꿈 품어 소년공 시절 부상에도 좌절 않고 책 놓지 않아 중·고 김정고시 마치고 중앙대 입학... 법학과 졸업

인권변호사 활동 중 노동자·장애인들과 사회운동도 함께 해

2010년 성남시장이 된 이후 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 청년 배당 등 정책 추진

경기도지사 재임하면서 복지중심 정책 펼치기도

2022년 20대 대선 패배에도 주저 않고 윤 정부에 맞서 계엄 해제 결의안 이끌고 국민과 함께 尹 탄핵 성사

내란 극복 등이 큰 과제

변호사가 된 이재명은 ‘돈’보다 ‘사랑’을 택했다. 인권변호사로 노동자의 편에서, 장애인의 편에서, 억울한 사람 곁에 섰다. 무료 변론을 마다하지 않았고, 시위 현장에서 함께 구호를 외쳤다. 정치권에서 그의 이름이 알려진 건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성남시장 재임 때였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어 빛바림에 앉은 성남시를 살리겠다며 취임 첫날 ‘모라토리엄(재무지급유예)’을 과감하게 선언하였다. 그는 특유의 결단력으로 5천억 원이 넘는 성남시의 부채를 갚아냈다. ‘쇼’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시민들은 투표의 결과로 대담해졌다. 그는 자신이 겪은 가난을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보답했다. 교복 한번 입지 못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교복’이라는 유니크한 정책을 내놓았다. “교복 한번 못입은 아이가 모든 아이에게 교복을 주겠다”고 선언하며, 전국 최초의 무

상교복 제도를 성남에서 시작했던 것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힘겹게 아이를 키운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만들었다. ‘청년 배당’은 청년들이 최소한의 여유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가 주장하는 ‘기본적 삶의 보장’은 단순한 정치 공약이 아니다. 그 자신이 이 사회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고통 속에서 우러난 신념이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면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도입 등 복지중심의 정책을 펼쳐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2022년 20대 대선에 출마한 그는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고배를 마셨다.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가장 아쉬운 패배였다. 그는 패배에 주저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되어 윤석열 정부와 날카로운 대립을 이어갔고, 연이은 수사와 정치적 탄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2024년 초, 부산에서 유세 중 흉기에 찔리는 사고도 있었다. 많은 이가 그의 정치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다.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다. 지난 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나라가 흔들렸다. 국회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을 이끌어 내고, 국민과 함께 탄핵을 성사시킨 이는 이재명이었다. 단호하고 냉철한 판단력, 광장의 다양한 민심을 끌어안는 소통 능력은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모았다.

이제 대통령이 된 그는 내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 모두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국내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에 대처함은 물론 미·중 갈등의 파고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속히 가까워진 북-러의 틈바구니에도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이 산적한 대한민국의 선장이 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높은 파고를 과감하게 헤쳐 나가야 한다.

대통령 이재명의 삶은, 맹자가 말한 바와 닮았다.

“하늘이 큰 임무를 맡기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뜻을 과롭히고, 몸을 고달프게 하며, 삶을 혼란스럽게 한다.”

대통령 이재명의 삶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은 인생”이 어떻게 국민을 감동시키는지, 어떻게 혼탁한 사회를 질서 있게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실천의 기록이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상징한다. 어려움을 딛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한 길.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의 선장이 되어 험난한 파도와 맞서 싸워 이겨내야 할 분명한 사명을 갖게 되었다.

그의 양 어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만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전북 공약 다시 보기

지역 실정에 맞췄다... 균형발전·신성장 동력 확보 목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2회에 걸쳐 전북을 방문해 전북의 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북 7대 핵심 공약과 시·군 지역발전을 위한 76개의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조기 대선으로 대선 준비기간이 짧고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다소 늦게 발표한 공약이었지만 역대 대선공약 중 가장 전북 지역 실정을 정확히 파악한 맞춤형 공약이라는 평이다.

그의 공약은 전북의 경제, 산업, 문화, 교통, 의료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지역 특성에 맞춘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 7대 핵심 공약

먼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및 K-컬처 육성과 관련,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K-영화·영상 산업 거점 조성,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개발, 국립전주박물관 일원 전주 K-헤리티지 복합 문화 단지 조성 등을 통해 문화·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금융 특화 도시 조성 및 공공의대 신설도 내놓았다. 전주를 금융 특화 도시로 조성하고, 공공의과 대학을 신설해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도 전북 7대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새만금 지역에 하이퍼 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이차전지 특화 단지를 조성하여 첨단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100% 기반의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관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에 완성하

전북 7대 핵심 공약

하계올림픽 유치·금융특화도시 조성 및 공공의대 신설
첨단 전략산업·새만금 RE100·탄소중립 선도 등 담겨져

도내 14개 시 군별 76개 맞춤형 공약

전주 K영화산업 거점 조성·군산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익산 식품박물관 건립·정읍 첨단의료복합 산단 조성 지원 등

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은 농생명 산업 수도로 나아가려는 전북의 실정에 잘 맞춰진 공약이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육성, 국가 식품클러스터의 K-푸드 수출 거점 성장 등을 통해 전북을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이외에도, 사통팔달 교통·물류 전북 광역권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속 추진,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물류 인프라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전북을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미래도시로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전북 14개 시·군별 주요 맞춤형 공약

이재명 당선인은 전북 14개 시·군별로 우리 동네 공약 총 76개의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전주시 맞춤형 공약으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반 시설 조성 적극 지원, K-영화·영상 산업 거점 조성 지원,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개발 지원, 국립전주박물관 일원 전주 K-헤리티지 복합 문화 단지 조성 지원, 피지컬 AI 특화 스타트

업 캠퍼스 조성 지원, 아주 호수 일원 K-레이크 조성 지원, 노후 전주 시외 버스터미널 이전 및 현대화 사업 추진 등이 있다. 군산시 공약으로, 근대문화 비엔날레 유치 지원, 의용소방대연수원 구축방안 모색, 군산 새만금 하이퍼 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지원, 재생에너지 박물관 건립 지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확대 방안 모색 지원, 군산 맥아·지역 특산 주류 산업 거점 단지 조성 지원, 청소년 전용 문화예술관 건립 지원 등이 있으며, 익산시의 맞춤형 공약은 식품박물관 건립 지원, 왕궁 자연환경 복원 프로젝트 지원, 익산역 광역 환승 센터 구축 및 역세권 복합 개발 지원, 세계유산 백제 왕궁 역사 문화 벨트 조성 지원, 부여-익산 고속도로 조기 착공 추진, 재난 안전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 등이 있다. 정읍시 맞춤형 공약에는 첨단 의료 복합 산업단지 조성 지원, 동진강 회북 프로젝트, 내장저수지 주변 개발 등 사계절 체류형 관광 벨트 조성 지원, 정읍경찰서·정읍우체국 이전 부지 개발 등 도심 재생 활성화 지원, 국책 연구 기관 기능 고도화 등이 담겨져 있다.

김제시 공약에는 지능형 농업 로봇 첨단 과학기술단지 조성 지원,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방안 모색, 김제 치유농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 해양생명과학관 건립 지원, 새만금 사업 차질 없는 추진, 종자 산업 혁신클러스터 추진 지원, 지방도 702호선 국도 승격 방안 모색 등이 있으며, 남원시 공약에는 국도 중부권·남부권 연결 광역 교통망 체계 개선 지원, 공공의과 대학 설립 지원, 제2 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지원, 남원생 복원을 통한 역사 문화 도시 조성 지원, 말 산업 인프라 및 수형 기관 유치 지원 등이 담겨져 있다.

순창군의 맞춤형 공약으로 미생물 농생명 산업지구 조성 지원, 경마사업 수행기관 유치 및 인프라 구축 지원, 전국대표 힐링·치유 웰니스 관광 도시 육성 지원, 순창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지원, 국도 24호선(순창-적성) 4차로 확·포장 추진 지원 등이 있으며, 부안군의 경우에는 노을대교 착공 및 도로 확장 지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완주군, 고창군, 임실군 등 각 시·군별로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공약이 제시돼 전북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본다.

그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가 공급, 전북 균형발전 및 차별 해소, 지역 소외감 극복 약속, 새만금 해수 유통 확대, 조력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생산강화 등의 지역 발전 공약을 제시했다. 이재명 당선인이 이러한 촘촘하고 각 지역 실정에 맞춘 공약을 통해 전북의 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이 이루어져 전북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에 획기적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한호성 지르는 민주 전북자치도당 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관계자들이 출구조사를 시칭하며 한호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민주 도당 “오늘 도민께 감사 인사”

이재명 대통령 당선 따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21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6월 4일 오전 7시 30분부터 각 지역위원회별로 감사 인

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갑은 꽃발정이 사거리(평화동)에서, 전주을은 효자동 KT 사거리에서 진행하고, 전주병은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진행한다.

/이만호 기자

전북선관위, 선거일 투표소에서 이중투표 시도 선거인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선거인 A 등 2명을 해당 지역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등 선거인 2명은 지난 5월 30일 익산과 정읍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선거일 투표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선거일인 6월 3일 본인의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사무員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가 있다.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 명부는 사전투표 종료 후 작성되며, 선거인의 사전투표 참여 여부와 투표한 사전투표소명이 기재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 제1

항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3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 제1항은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사무관계자 등 외에는 투표소에 출입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투표소에 들어간 자는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의 이중투표 시도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